

北韓의 對南動向 分析

(1993. 7~9)

1993. 9. 30

柳 浩 烈(北韓研究室 研究委員)
鄭 永 泰(北韓研究室 責任研究員)
崔 壽 永(北韓研究室 責任研究員)
許 文 寧(北韓研究室 責任研究員)
全 東 震(國際研究室 責任研究員)

民族統一研究院

目 次

I. 북한의 3/4분기 대남동향 개황.....	1
1. 대남동향 결정요인별 개관.....	1
2. 월별 개관.....	3
II. 제2단계 북·미 고위급회담과 북한의 핵사찰 문제.....	4
1. 개관.....	4
2. 경과.....	5
3. 분석.....	7
4. 전망.....	8
III. 제4차 범민족대회 개최.....	9
1. 개관.....	9
2. 경과.....	9
3. 분석.....	12
4. 전망.....	14
IV. 북한의 「특사교환」 재제의.....	15
1. 개관.....	15
2. 경과.....	16

3. 분석.....	18
4. 전망.....	21
V. 남북경제교류.....	22
1. 개관.....	22
2. 경과.....	23
3. 분석.....	25
4. 전망.....	26
VI. 조총련 동향.....	27
1. 개관.....	27
2. 정치분야.....	28
3. 경제·사회분야.....	33
4. 전망.....	35

I. 북한의 3/4분기 대남동향 개황

1. 대남동향 결정요인별 개관

- 북한의 대남동향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국제환경 요인, 한국내부의 요인, 북한 자체내의 요인 등으로 구분할 수 있음.
- 93년 3/4분기중 국제환경 요인의 변화로서는
 - － 첫째, 북한·미국간 제1단계 고위급 회담이 4차에 걸쳐(6.2, 6.4, 6.10, 6.11) 뉴욕에서 개최되었고 이어 2단계 회담이 제네바에서 3차례(7.14, 7.16, 7.19) 개최되어 북한이 IAEA와 핵사찰 문제를 계속 협의하기로 약속하는 등 NPT체제의 잔류를 선언함으로써 UN안보리는 북한에 대한 제재조치 등 강경대응을 유보하고 있음.
 - － 둘째, IAEA 총회는 핵사찰 문제와 관련하여 IAEA와의 2차협상을 강경하게 거부하고 있는 북한에 대해 조속한 시일 내에 핵안전협정의 완전한 이행을 촉구하는 결의안을 채택하고자 함.
 - － 셋째, 미국은 북한과 IAEA간의 핵사찰 문제에 대한 합의 이행 및 남북한간의 실질적인 대화재개가 3단계 미·북한 고위급회담의 전제조건임을 거듭 천명함으로써 북한의 태도변화를 위한 압력을 가하고 있음.
 - － 넷째, 미국과의 협상재개를 원하고 있는 북한으로서는 그들의

핵문제에 대한 국제사회의 비판적인 여론을 감안하여 명목상으로나마 IAEA와의 핵사찰 문제 협상과 남북대화를 지속할 것으로 보임.

○ 한국내부의 요인으로는

- 첫째, 김영삼 정부가 출범한 이후 미국의 클린턴 대통령은 한국을 방문하여 한·미간의 강력한 공조체제를 확인하고 북한에 대해서는 강력한 경고를 함으로써 한국을 배제한 북한·미국간의 관계개선이 불가능함을 표명함.
- 둘째, 문민정부의 남북대화 및 통일에 대한 구체적인 방안이 (7.6 민주평화통일정책자문회의 제6기 출범에 즈음한 김영삼 대통령의 개회사) 확립됨에 따라 통일원을 비롯한 통일관계부처들의 대북정책 방향이 일관되게 확립되고 있음.
- 셋째, 8월 범민족대회 개최에 즈음하여 한국내의 여러 시민사회단체들은 정부와 직접대결하는 과격한 방법을 지양하고 「남북인간띠잇기」대회와 같은 평화적 집회를 정부의 협조하에 진행함으로써 김영삼 정부의 대북정책에 대한 높은 지지를 반영하고 있음.
- 넷째, 북한은 남북대화를 재개하되 한국정부내의 특정인을 지명함으로써 북한에 유리한 협상국면을 유도하려던 방침을 변경할 것으로 보임.

○ 북한 자체내의 요인으로서

- 첫째, 북한은 북·미 고위급회담의 결과가 그들의 입장이 관철된 것이라는 측면에서 선전을 강화하였으나 실질적인 성과가 없자 93을지포커스렌즈 훈련 및 간첩선 침투공작 등을 이유로 한국정부를 격렬히 비난함으로써 자신들의 입장을 정당화하고 있음.
- 둘째, 미국과 중국간의 갈등이 점증되고 구사회주의 국가 일부에서는 보수파들의 발언권이 점차 강화됨에 따라 북한은 그들의 체제유지에 어느 정도 자신감을 회복한 것으로 보이며, 그동안 남북관계에서 취해오던 폐쇄적, 수세적 입장에서도 탈피할 것으로 보임.

2. 월별 개관

- 7월중 북한은 미국과의 2단계 고위급 회담을 3차에 걸쳐(7.14, 7.16, 7.19) 제네바 주재 미국대표부와 북한대표부에서 번갈아 개최하여 북한이 IAEA와 핵사찰 문제를 계속 협의하기로 약속하였으며 핵문제 해결을 위한 내용을 담은 「발표문」을 공동발표하였음.
- 8월중 北韓은 제4차 汎民族大會 추진과 관련하여 남한, 북한, 해외 등 3자 실무회담 개최를 일방적으로 요구한(8.1, 8.5, 8.6, 8.13) 끝에 범민족대회를 남북한 및 해외에서 분산 개최기로 결정하고 8월 14~15일 평양에서 제4차 범민족대회 및 기타 관련 행사를 진행하였음.

- 9월중 북한은 평양에서 IAEA와 핵사찰 문제에 관한 협상을 실시 하였으나(9.1~3) IAEA의 공정성을 문제삼는 등 불성실한 태도로 협상에 임하여 3단계 北·美 고위급회담의 성사 여부를 불투명하게 하였으며, 남북한 특사 교환문제에 있어서도 특사교환을 위한 실무접촉을 제안하면서도(8.31, 9.6, 9.9, 9.21) 한국에 대하여 핵전쟁 연습 중지 및 國際共助體制 포기를 선언하도록 요구함으로써 실질적인 남북대화의 의지가 없음을 드러내었음.
- 다만 미국이 3단계 北·美會談의 전제조건으로서 IAEA와의 핵협상 및 남북대화의 재개를 일관되게 강조함에 따라 북한은 표면적으로나마 남북대화의 재개를 위한 실무대표들간의 협상을 재개할 전망이다.

II. 제2단계 북·미 고위급회담과 북한의 핵사찰 문제

1. 개관

- 미국의 갈루치 차관보와 북한의 강석주 외교부 제1부부장을 수석 대표로 하는 북한·미국간 제1단계 고위급회담이 1차회담(6.2)후 연속적으로 2차(6.4), 3차(6.10), 4차(6.11)에 걸쳐 UN본부에서 개최되었음.
- 제2단계 북·미 고위급회담은 3차(7.14, 7.16, 7.19)에 걸쳐 제네바

주재 미국대표부와 북한대표부를 번갈아 가며 개최되었음.

- 참석한 양측 대표는 미국측의 로버트 갈루치 국무부 정치·군사담당 차관보 등 12명과 북한의 강석주 외교부 제1 부부장 등 10명이었음.

- 제2단계 회담후 북·미 양측은 북한의 핵문제 해결에 대한 원칙을 거론하는 수준의 「발표문」을 내놓았음.
 - 「발표문」에서 북한은 IAEA와 핵사찰 문제를 계속 협의키로 약속하였으며, 한반도 비핵화 공동선언의 이행을 인정하였음.
- 그러나 북한은 현재까지 IAEA와의 실질적인 핵사찰 협상을 거부하고 있을뿐만 아니라 한반도 비핵화 공동선언의 이행을 위한 핵통제 공동위원회 회의의 재개조차도 거부해오고 있음.

2. 경과

- 제2단계 북·미 고위급회담에서 북한측은
 - 미국의 대북 핵불사용에 대한 법적 담보
 - 미핵무기의 한국내 불배치 담보
 - T/S 훈련 종식
 - 대북 경수로 지원등을 요구하였음.
- 한편 미국측은
 - 북한의 핵투명성 확보를 위한 핵사찰 수용(IAEA와 협의 계

속)

— 대북협력문제

— 남북대화재개 등을 촉구하였음.

○ 이러한 쌍방의 요구들은 서로 상충되는 전제를 깔고 있기 때문에 쉽사리 실현되기에는 어려움이 따르고 있음.

— 특히 북한측은 “앞으로 IAEA와의 협상에서 IAEA의 불공정성을 중점적으로 토의하자”고 함으로써 쉽사리 핵사찰을 수용하지 않을 의도를 보이고 있는 반면 미국측은 북한이 “추가시설에 대한 방문” 등 미해결의 안전조치에 대하여 조속히 IAEA와 협의할 것을 촉구해오고 있음.

— 또한 북한은 미국이 요구한 것으로 보이는 남북대화재개 등에 대해서도 원칙적으로는 수용하였으나 향후 “남북대화의 성과여부는 남측의 태도에 달려있다”고 주장한 것으로 보아 이에 대한 전향적 진전을 불투명하게 하고 있음.

○ 북한은 NPT 탈퇴로 중단되었던 IAEA의 6차 대북사찰 이후 지난 6월과 8월에 걸쳐 7차와 8차 사찰팀을 받아들였으나 사찰활동의 범위를 감시용 카메라와 봉인장치 등 사찰장비의 유지, 보수화 등에 국한시킴으로써 실제적인 사찰(임시사찰, 통상사찰, 특별사찰)을 거부하였음.

○ 또한 북한은 지난 9월 1~3일 평양에서 개최된 IAEA와의 협상에서도 IAEA의 공정성을 문제삼는 등 핵사찰 수용문제에 대한 불

성실한 태도로 일관해 왔음.

- 북한측은 대북 특별사찰과 관련한 모든 결의안의 무효와 IAEA의 불공정성 시인 및 관련자 처벌까지도 요구하였으며,
- 불공정행위를 심각하고 신중히 시인할 경우에만 IAEA와의 건설적인 협의를 할 수 있으며 핵안전 관련문제도 다룰수 있다고 전제하였음.

- 나아가 북한은 IAEA 총회에서 대북 관련 핵결의안이 채택될 경우 NPT를 탈퇴하겠다고 위협하고 있음.
- 또한 북한은 남북대화도 핵전쟁 연습중지와 국제공조체제 중지 등과 같은 한국이 수용하기 어려운 조건을 내세워 사실상 거부해오고 있음.

3. 분석

- 북한은 핵해결의 수순을 가능한한 늦춤으로써 궁극적인 핵개발을 위한 시간을 확보하기 위하여 지연작전을 쓰고 있으며 동시에 이러한 일련의 과정을 통하여 미국으로부터 보다 많은 이익을 도출해내고자 하고 있음.
- 북한은 핵협상을 지연시켜 미국의 입지를 좁힘으로써 제1, 2 단계 북·미 고위급회담에서 밝힌 합의사항들을 관철시키고자 노력하고 있으며,
- 궁극적으로는 북·미관계 개선까지도 의도하고 있는 것으로

보임.

- 사실상 북한은 핵사찰 문제와 관련하여 IAEA와의 협상이나 남북 대화의 재개를 통한 상호사찰 협상 등을 무시함으로써 그들의 핵 문제 해결을 위해서는 북한과 미국간의 직접적인 대화만이 유일한 수단임을 강조하고 있음.
- 북한의 이러한 의도는 제3단계 북·미 고위급회담을 빠른 시일에 성사시켜야 할 필요성과 일치한다고 볼 수 있음.
- 결국 북한은 핵카드를 이용하여 미국과 직접 회담함으로써 미국과의 정치적 협상을 지속하고자 의도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됨.

4. 전망

- 향후 북한은 긍정적인 자세로 IAEA와의 협상을 지속할 것이지만 실질적인 핵사찰 수용과 관련된 협상은 IAEA가 아니라 미국과의 직접적인 회담을 고집할 것으로 보임.
- 한국과의 관계에 있어서도 핵문제와 같은 중대한 사안에 대해서는 한국을 철저하게 배제시켜 국제적으로 고립시키고자 할 것으로 보임.
 - 북한이 비록 남북대화의 재개를 요구한다고 하더라도 그것은 남북한 사이에서 핵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것이라기 보다는 미국과의 협상을 진전시키기 위한 잠정적인 수단에 불과한 것

일 가능성이 큼.

- 향후 북한은 미국과의 회담이 전제되지 않는한 실질적인 남북대화의 재개를 추구하지 않을 것으로 전망됨.

Ⅲ. 제4차 범민족대회 개최

1. 개관

- 북한은 8월 14~15일 평양에서 제4차 범민족대회 및 기타 관련 행사들을 남측, 해외측 대회와 별도로 진행하였음.
- 북한은 위의 행사를 통해 “제4차 범민족대회 결의문”, “해외동포들에게 보내는 호소문”, “범청학련 통일방안”, “범청학련 공동 결의문”, “미 대통령 빌 클린턴에게 보내는 편지” 등 여러 문건들을 채택하였음.

2. 경과

- 북한의 제4차 범민족대회 추진 일정은 다음과 같음.
 - 1.26 범민련 북측본부 중앙위는 총회를 개최하여 금년 범민족대회 개최를 결의함.
 - 5.29~30 범민련 의장단 회의를 북경에서 개최하여, 제4차 범민

족대회를 8월 15일 서울에서 개최기로 결정함.

- 범청학련 공동의장단도 국제전화를 이용하여 제3차 청년학생축전 실현을 결의함.
- 한국, 「치안관계 장관회의(7.24)」에서 범민족대회 불허 방침 결정

- 8. 1 범민련 북측본부 대변인이 「제4차 범민족대회 준비를 위한 남·북·해외 3자 실무회담(8.6 서울)」에 대표 파견방침 발표
- 8. 5 「3자 실무회담」 북측 대표단 판문점 도착, 통과불허 비난성명 발표후 철수
- 8. 6 범청학련 북측본부 의장이 범민족대회에 대표 150명 파견 담화발표
- 8.13 범민족대회 북측 대표 300명(단장: 백인준) 판문점 도착, 대남 비난성명 발표후 철수
범민련 북측본부, 범민족대회 남·북·해외 분산개최 공시
- 8.14~15 북한 범민족대회 관련 각종 행사 개최
 - 인민대학습당에서 「전민족대단결과 조국통일에 관한 대토론회」 개최
 - 윤이상음악당에서 「범민족통일 음악회」 개최
 - 인민문화궁전에서 「제4차 범민족대회」 개최
 - 인민문화궁전에서 「범청학련 북측본부 중앙위 확대

회의」 개최

- 제4차 범민족대회 결의문 요지는 다음과 같음.
 - 1. 90년대 통일을 성취하려는 민족공동의 결의를 재확인함.
 - 2. 외세의 간섭을 배격하고 민족자주의 원칙을 철저히 실현해 나아갈 것임.
 - － 미군·핵무기 철수, T/S 중지, 핵우산 철거, 남조선의 외세 추종정책 저지·파탄 등
 - 3. 남조선에서 민족적 화해와 단합을 가로막는 모든 법적, 제도적 장치를 철폐키 위해 투쟁할 것임.
 - － 국가보안법 철폐, 통일애국인사 석방·복권 등
 - 4. 민족공동의 통일방도를 확정하기 위해 적극 노력할 것임.
 - － 빠른 시일안에 북과 남, 해외의 각당·각파·각계층이 참가하는 협상의 마당 마련
 - 5. 민족의 대단결을 실현하기 위해 모든 것을 다할 것임.
 - － 전민족대단결 10대강령을 중심으로 단결도모
 - 6. 범민련을 강화하고 전민족적 연대투쟁을 벌여 나아갈 것임.
 - － 빠른 시일안에 북·남·해외 범민련 3차회담 개최
- 제3차 범청학련 공동결의문 요지는 다음과 같음.
 - 1. 민족자주정신에 기초한 전민족의 대단결로 조국통일의 길을 열어 나아가는 투쟁에 계속 앞장설 것임.
 - 2. 하나의 민족, 하나의 국가, 두개 제도, 두개 정부에 기초한 연

방제 방식으로 범민족통일국가를 건설하기 위하여 투쟁할 것임.

3. 북·남·해외동포 청년학생들 사이의 자주적인 접촉과 교류를 발전시켜 나아갈 것임.

— 국가보안법 철폐, 대화창구 일원화 분쇄

4. 범청학련 조직을 확대, 강화하여 나아갈 것임.

3. 분석

○ 제4차 汎民族大會는 예년에 비해 열기와 규모에 있어 축소된 반면, 선전선동의 측면은 지속된 양상을 보여주었음.

— 북한은 종래 대회직전 분위기 고취를 위해 실시해왔던 「백두-한라 대행진」 행사와 「평양시 환영 군중대회」를 개최하지 않았으며, 「남·북한 당국에게 보내는 편지」를 채택하지 않았음.

— 그러나 북한은 이 대회를 통해 한국정부를 반통일세력으로 매도·선전하는 데 주력함으로써 종래의 대남 통일공세를 지속하는 모습을 보였음.

○ 금번 북한의 제4차 범민족대회는 남·북·해외 분산개최 방침에 따라 최초로 평양에서 단독 개최됨.

— 남한의 경우 8월 14~15일 한양대학교에서 범민족대회 남쪽 추진본부(대회장: 문익환, 상임공동본부장: 강희남) 주최하에

평화통일 토론회 및 범민족회의 등을 가짐.

— 해외의 경우 東京 도시센터에서 범민련 해외본부(해외본부 의장: 윤이상) 주최하에 범민족대회 등을 갖고, “결의문” 및 “북남당국에 보내는 편지”, “미 대통령에게 보내는 편지” 등을 채택하였음.

○ 「범청학련 통일방안」에서는 ‘최고민족연방회의’를 ‘전민족회의’로 명칭을 변경한 점, ‘통일헌법 제정’을 명시하고 국호를 그 후에 결정한다고 한 점 등이 새롭게 나타나고, 그외에는 기존의 고려연방제 통일방안과 구조와 기능 면에서 유사함.

○ 북한은 범민족대회를 통해 그들의 통일노선 및 통일의지를 선전하는 한편, 한국측의 반통일성을 왜곡하여 부각시킴으로써 남한 사회내의 일부세력을 선전선동하고, 경제와 국제관계 등에서 위기에 처한 그들의 체제안정에 활용하려는 의도를 가진 것으로 분석됨.

○ 북한은 범청학련의 “공동결의문”을 통해 “범청학련 통일방안”을 제시하였음.

— 연방제 주장을 다시 제기한 것은 3대혁명역량의 전반적 약화에 처해서도 대남 공세적 방어를 모색하고 있음을 나타내는 것임.

— 평화협정 체결을 위한 대미협상을 강조한 것은 한반도문제를 미국과의 양자협상 문제로 지속화하려는 전략이며,

- 대화창구 일원화 분쇄 주장을 통해 기존의 남북고위급회담 채널을 가급적 무시하는 한편, 정치협상회의와 범민련 대회 등을 통해서 남북대화를 대규모 정치선전장화 하려는 의도가 있는 것으로 분석됨.

4. 전망

- 향후 북한은 「전민족대단결 10대강령」에 주력하면서 팀스피리트 훈련중지·국가보안법 철폐·창구일원화 폐지·연방제 통일방안 지지 등 대남투쟁목표를 관철하기 위해 범민련 및 범청학련의 조직활동을 더욱 강화해 나갈 것으로 전망됨.
 - 특히 범청학련은 “범청학련 자주적 결의투쟁 공동 결의문”에서 9월 중순부터 11월 3일까지를 “범청학련 자주 교류기간”으로 설정하였는 바, 남측학생들에 대해 “당면투쟁과제”에서 채택한 「전민족통일정치협상회의」를 적극 선전할 것으로 예상됨.
- 북한은 제4차 범민족대회의의 서울개최 성사여부가 한국정부의 “문민성을 가늠하는 시금석”이라고 주장해 왔는 바, 재야와 정부간의 정면대결을 촉발시키는 한편 국민의 대정부 불신감 조장을 획책할 것으로 보임.
- 결과적으로 북한은 범민련 및 범청학련 남측본부를 비롯하여 한총련 등과의 통일투쟁연대를 강화함으로써 대남통일전선을 구축

하려는 한편, 이들의 대북접촉 및 교류를 선동하는 한편, 남한내 통일논의의 분열과 사회혼란을 유도하는 데 주력할 것으로 전망됨.

IV. 북한의 「특사교환」 재제의

1. 개관

- 8월 31일 북한은 그동안의 침묵을 깨고 남북한 특사를 상호교환 하자는 제의를 하였음.
- 9월 6일 북한 강성산 총리는 최고위급 특사교환 제의와 관련하여 전제조건으로 핵전쟁 연습 중지와 국제공조체제의 포기를 남한 측에 요구하였음.
- 북한측 주장에 대하여 남한측이 조건없이 실무대표접촉을 제안하자 북한은 9월 9일 특사교환을 성사시키기 위한 북한측 요구조건에 대한 남측의 명백한 태도를 밝힐 것을 재차 요구하였음.
- 북한은 9월 21일 담화를 발표하여 남한이 특사교환 문제를 성사시키기 위해 북한측이 제기한 조건들에 대하여 긍정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지 않다고 주장하면서 남한이 북한 영해에 간첩선을 침입시키는 등 남북한 사이에 새로운 긴장을 조성하고 있다고 비난하고 남한의 긍정적인 호응을 촉구하였음.

2. 경과

- 북한은 5월 25일 최초로 「특사교환」에 대한 문제를 제기한 이래 13차에 걸친 남북한 상호간의 제의를 되풀이 한 끝에 6월 26일 강성산 총리의 담화를 통해 일방적으로 「특사교환」 문제를 파기 하였으나 8월 31일 남북고위급회담 북측대변인 담화를 통해 「특사교환」 문제를 재차 제기하였음.
 - － 북한은 남북한 쌍방이 대화를 재개하기 위한 특사교환이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남한이 모든 적대적인 핵전쟁 연습을 중지하고 국제공조체제를 추구하지 않으며 대화와 평화에 역행하는 행위를 되풀이하지 않을 것을 명백히 할 때 가능하다고 주장함.
 - － 남북 특사교환에 있어 특사의 급에 구애받지 않고 쌍방의 최고위급이 임명하는 임의의 급의 특사교환이 가능하다고 수정 제의함.
 - － 특사교환시 다룰 의제로서 비핵화문제, 긴장완화 및 남북합의서 이행을 위한 공동대책, 전민족의 대단결문제, 최고위급 회담 실현 등을 구체적으로 제시함.
- 북한 강성산 총리는 9월 6일 황인성 국무총리 앞으로 전화통지문을 발송하여 「특사교환」 문제와 관련하여 남한이 북한측 요구에 대해 명확한 태도를 보일 것을 재삼 촉구하였음.
 - － 대화를 통해 핵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일방이 타방을 공

격하기 위한 핵전쟁 연습을 중단해야 하며 동족끼리 해결해야 할 문제를 국제공조체제로 접근하는 것은 남북대화나 북·미회담에 대해 모순된 행위라고 비난함.

- 한국에 대하여 9월 8일까지 시한을 정하여 납득할만한 태도 표명을 요구하면서 9월 10일 판문점 통일각에서 실무접촉을 가질 것을 제의
- 실무접촉에는 부부장급을 단장으로 하는 3명의 대표와 4명의 수행원을 보낼 것임을 명시함

○ 9월 6일 북한측 전화통지문에 대하여 우리측이 조건부 실무접촉을 반대하자 북한측은 9월 9일 남북고위급회담 북측대표단 대변인이 이와 관련하여 조선중앙통신사 기자가 제기한 질문에 답하는 형식으로 남한의 태도결정을 재차 촉구함.

- 북한측은 핵전쟁 연습 중단과 국제공조체제의 포기는 특사교환의 근본목적과 남한의 부당한 대결자세와 관련된 정당한 주장이라고 강조
- 특히 핵문제를 국제공조하에서 해결하려는 남한측 입장에 대하여 외세와 결탁하여 대화상대방인 북한을 모의하려는 행위라고 비난함.
- 남한측이 명백한 태도표명을 하기 위해서는 시간이 더 필요한 것같다는 구실을 내걸어 9월 23일 경에 특사교환을 위하여 남한이 9월 20일까지는 긍정적인 태도표명을 할 것을 요

구함.

- 9월 21일 남북고위급회담 북측 대표단 대변인은 담화를 발표하여 북한측 제의에 대하여 남한측이 아무런 긍정적인 태도를 표명하지 않았다고 비난함.
 - 그러나 한국은 9월 17일 남북한 「부속합의서」 발효 1주년을 기념하여 남북고위급회담 대변인 성명을 통하여 북한의 전제조건을 수락할 수 없으나 남북간 특사교환을 위한 실무접촉에 대해 성의있는 답변을 하였음.
 - 북한은 특사교환 문제에 대한 남한측의 무성의를 비난함과 동시에 남한이 북한측 영해에 간첩선을 침입시켜 남북관계를 악화시키고 남북대화에 새로운 인위적인 장애를 조성하였다고 비난함.
 - 아울러 북한은 남한측에 간첩선 침투와 같은 도발행위와 그들이 앞서 제기한 원칙적 문제들에 대한 명백한 태도를 9월 30일까지 표명할 것을 요구하며 이러한 문제가 적절히 해결되어 양측이 신뢰할 수 있는 대화의 상대가 된다고 판단되면 10월 5일 판문점에서 실무대표 접촉에 나설 것임을 표명함.

3. 분석

- 북한이 지난 8월 31일 「특사교환」 문제를 협의할 것을 제안한 것은 북한과 미국과의 3단계 회담을 목전에 두고 회담을 성사시키

기 위한 방편으로 제기한 것임.

- 북한은 제네바에서 열린 미국과의 2단계 회담에서 IAEA-북한간의 핵사찰문제와 남북대화 재개를 약속하였음.
- 우리측은 7월 23일 북한이 특사교환을 위한 실무접촉을 제의할 경우 특사의 자격을 양측의 최고당국자가 임명하는 자로 수정하여 받아들일 것을 결정함.
- 8월 4일 황인성 국무총리는 대북 전화통지문을 통해 남북핵통제 공동위원회를 개최할 것을 제의함.
- 북한·미국간의 3단계 회담에서는 양국간의 관계개선 문제가 본격적으로 논의될 예정이고 어느 정도 성과가 예상되는 바, 북한으로서는 미국이 요구하고 있는 남북대화의 진전에 대해 표면적으로나마 성의를 보이기 위하여 남북간 「특사교환」 문제를 제기한 것임.

○ 북한은 북한·미국간의 3단계 회담에 심혈을 기울이고 있는 상황에서 9월 1일부터 3일까지 평양에서 열린 IAEA-북한간 협상회담이 성과없이 종결되자 「특사교환」 문제에 관해 남한이 현단계에서 받아들일수 없는 조건을 계속 고집함으로써 3단계 미국과의 회담개최의 전제조건 충족을 당분간 유보하고자 하는 것으로 보임.

- 이미 우리측과 미국은 북한이 핵문제 해결에 성의를 보일 경우 94년도 한·미합동군사훈련의 축소 내지 중지를 발표한 바

- 있어 韓·美 핵전쟁 연습 중지 요구는 현실성이 없음.
- 북한의 핵문제 해결을 위해 국제협력을 유지하는 것이 우리 측과 미국의 일관된 입장인 까닭에 북한은 마지막까지 이를 전제조건으로 내세워 남북대화의 실질적 재개를 3단계 北·美會談 이후로 연기하려는 의도를 드러냄.
- 북한이 새로이 간첩선 침투사건을 제기하고 나온 것은 북·미간의 3단계 회담이 성사되기 전까지는 특사교환을 매개로 한 남북대화의 재개를 진실로 원하지 않고 있음을 보여 주는 것임.
- 북한은 8월 24일 미국과 「미군유해 송환등에 관한 합의서」를 발효시켰으며 이보다 앞서 7월 12일 한국전쟁중 사망한 미군 유해 17구를 미국에 인도할만큼 미국과의 관계개선에 노력하였음.
 - 9월 13일 북·미 고위급회담 미국측 대표인 갈루치 차관보는 방한하여 남북대화가 미·북회담 성사의 전제조건임을 재확인하고 남북대화 지연의 책임이 북한에 있음을 상기시키면서 미국으로서는 현단계에서 북한과의 수교를 전제로한 정치적 회담이 어려울 것임을 밝힌바 있음.
 - 이러한 상황에서 북한은 간첩선 침투를 강도높게 비난하면서 남한의 간첩선 침투의 목적이 첫째, 고의적으로 남북대화 장애요인을 제공하기 위한 것이며 둘째, 북·미 고위급회담의 성사를 방해하기 위한 것이라고 선전함으로써 북한의 진심이

남한을 제외시킨채 북한·미국간의 3단계 회담을 성사시켜 양
국간 早期修交를 촉진하기 위한 것으로 보임.

4. 전망

- 북한은 미국과의 3단계 고위급회담에서 가시적인 성과를 도출해
내기 위하여 남북대화의 재개를 고의적으로 지연시키고 IAEA와
의 협상에도 적극적으로 나오지 않고 있으나 실제 IAEA의 정기
총회에서 대북 결의안이 채택될 경우 유엔에서의 대북 경제제재
등의 조치가 취해질 가능성이 높아질 것이므로 북한으로서는 이
러한 상황으로까지 진전되는 것을 바라지는 않을 것임.
- 2단계 北·美會談 결과 북한은 자국의 체면을 유지하면서 미
국과의 협상토대를 마련하였던 바, 이를 포기하지는 않을 것임.
- 3단계 회담의 조기개최 및 이를 통한 미국과의 정치적, 경제
적 관계정상화를 위해서 미국 및 국제사회에 북한이 가지고
있는 수단을 최대한 활용할 것으로 예상되는데 남북대화 및
IAEA와의 회담진전은 가장 현실성 있는 방법으로써 조만간
북한은 이들 조건을 수락하는 선에서 미국과의 3단계 고위급
회담에 임할 것임.
- 3단계 北·美會談이 진행됨에도 불구하고 북한은 IAEA와의
절차적인 문제만을 놓고 계속 협상을 벌이는 동시에 남한과
도 실질적인 대화, 협상이나 상호사찰 등을 받아들이지는 않
을 것이며 이는 미국과의 완전한 관계개선시에나 가능할 것

으로 보임.

V. 남북경제교류

1. 개관

- 남북한 교역승인은 1988년의 104만달러에서 1991년 1억 9,217만달러, 1992년 2억 1,350만달러로 증가하였음.
 - － 반출입 통관은 1991년 1억 1,127만달러(반입 1억 572만달러, 반출 555만달러), 1992년 1억 7,343만달러(반입 1억 6,286만달러, 반출 1,056만달러)로 대폭 증가하였음.
- 1993년 1월에서 8월까지의 반출입 승인실적은 1억 3,295만달러로 전년도 같은 기간에 비해 반입·반출 모두 줄어 전체적으로 14.4% 줄었음.
- 1993년 1월에서 7월까지의 반출입 통관실적은 1억 1,389만달러로 전년도 같은 기간의 1억 95만달러에 비해 12.8% 증가함.
 - － 반입 1억 1,141만달러, 반출 247만달러로 전년도 같은 기간에 비해 반입은 소폭 증가한 반면 반출은 줄어들었음.
 - － 교역구조면에서 반입품목은 여전히 철강금속류가 주축을 이루고 있으며 반출품목은 위탁가공을 위한 원부자재(섬유류)가 대부분임.

2. 경과

- 6월중 남북교역승인실적은 총39건에 1,693만달러였으며, 이중 반입승인은 1,692만달러, 반출승인은 1.4만달러임.
 - － 교역승인실적은 전월 및 전년 동기에 비해 다소 감소함
 - － 반입승인은 38건의 21개품목, 반출승인은 1건의 3개품목임.
 - － 통관실적은 반입 55건으로 1,667만달러, 반출 2건으로 3만달러, 합계 57건의 1,670만달러로서 전월에 비해 20.7% 감소
 - － 반입품목은 아연괴, 금괴, 은괴 등 철강금속류가 1,476만달러로 88.5%, 그다음이 섬유류 52만달러로 3.1%임.
 - － 반출품목은 임가공 원부자재인 섬유류 3만달러임.

- 7월중 남북교역승인실적은 41건에 1,672만달러였으며, 이중 반입승인은 1,595만달러, 반출승인은 77만달러임.
 - － 교역승인실적은 금액면에서 전월과 비슷한 수준이나 전년 동기의 51.2%로 절반수준에 불과하여 지난해 4/4분기 이후의 감소세가 지속됨.
 - － 반입승인은 31건, 품목수는 17개품목으로 전월보다 4개 줄었음.
 - － 반입승인품목은 금괴, 아연괴 등 철강금속류가 대부분이며 1,425만달러로 89.3%를 차지함.
 - － 반출승인은 10건, 15개품목으로 전월에 비해 대폭 늘어남.
 - － 반출승인품목은 섬유류가 53만달러로 68.5%, 메탄올이 20만달러로 26.4%를 차지함.

- 임가공교역 승인실적은 7건의 77만달러(반입승인 금액기준)로 상반기에 이어 증가세가 계속되고 있으며 품목도 셔츠, 자켓, 스커트 외에 남자슈트, 오리털잠바가 최초로 승인됨.
 - 교역참여업체는 14개사로 전월보다 3개사가 줄었음.
 - 중개지는 홍콩 37건, 중국 1건, 일본 1건임.
 - 통관실적은 반입 47건으로 1,761만달러, 반출 15건으로 75만달러, 합계 62건의 1,836만달러로 전월에 비해 10% 증가함.
 - 반입품목은 금괴, 아연괴, 은괴 등 철강금속류가 1,682만달러로 95.4%임.
 - 반출품목은 위탁가공 원부자재인 섬유류가 52만달러로 69.7%이며, 이외 화학제품(메탄올)이 19만달러로 25%임.
- 8월중 남북교역승인실적은 36건에 2,299만달러였으며, 이중 반입승인은 2,263만달러, 반출승인은 37만달러임.
- 지난해 8월 이후 처음으로 월교역 승인규모가 2천만달러를 넘었음.
 - 반입승인은 35건, 품목수는 23개품목으로 전월보다 5개품목이 늘었음.
 - 반입승인품목은 금괴, 아연괴 등 철강금속류가 87.9%로 대부분이며 기타 섬유류가 126만달러로 5.6%를 차지함.
 - 반출승인은 1건으로 섬유류(폴리에스터 단섬유) 뿐임.
 - 1993년도 들어 급신장을 보인 위탁가공교역은 8월중 승인실

적이 없음.

- 교역참여업체는 전월보다 1개사 증가한 15개사임.
- 중개지는 홍콩 28건, 일본 6건, 중국 1건 등임.

3. 분석

- 남북한 교역의 특징은 첫째, 북한으로부터의 반입에 전적으로 의존하고 있음.
 - 1993년 8월까지의 반출입 승인은 1억 3,295만달러이며 이중 반입승인이 94.2%를 차지함.
 - 1993년 7월까지의 통관현황은 총 1억 1,389만달러이며 이중 반입승인이 97.3%를 차지함.
- 둘째, 반입품목은 다양화되지 않고 금괴, 아연괴 등의 철강금속류에 집중되어 있음.
- 셋째, 소규모의 반출도 임가공을 위한 원부자재(섬유류)에 국한되어 있음.
- 이러한 남북한 교역의 반입의존은 기본적으로 북한의 외화부족과 남한상품에 대한 경계심에서 비롯됨.
 - 북한은 부족한 외화(硬貨)를 획득하기 위해 가급적 남한으로부터의 반입을 꺼리고 있음.
 - 북한주민을 통제하기 위해서 남한상품(완제품)의 반입은 허

용되지 않고 있음.

- 반입품목의 철강금속류 집중은 북한산업의 취약성을 반영하고 있음.
 - 북한은 국제시장에서 경쟁력이 있는 상품이 거의 없음.
 - 다만 철강금속류에서는 완제품보다는 반제품형태로 경쟁력이 있음.

4. 전망

- 북한은 남북한 교역을 당면한 북한의 경제난과 외화부족을 타개하기 위한 방편으로 인식하고 있음.
- 그러나 1993년 들어 교역의 증가추세가 주춤하고 있는 것은 북한의 핵문제가 걸려있기 때문임.
- 정치적인 문제가 해결된다 하더라도 남북한 경제교류를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상품교역과 더불어 북한의 구매력을 향상시킬 수 있는 방안이 고려되어야 함.
- 남북한 직교역이 이루어진다 하더라도 위의 이유로 인해 교역의 증진에는 한계가 예상됨.
- 따라서 현재 진행중인 위탁가공은 현단계에서 남북한 경제교류 활성화에 일익을 담당할 것임.

- 남한의 기업들은 보다 면밀하게 북한에서 임가공 생산이 가능한 품목을 조사하고,
- 현재 진행 중인 원부자재의 공급 및 가공임금을 지불하는 단 순위탁가공에서 설비제공까지도 포함하는 설비제공위탁가공으로 발전시키는 방안도 고려해야 할 것임.
- 북한에서 임가공된 제품을 내수뿐만 아니라 제3국으로 수출하는 방안도 강구하여야 할 것임.

Ⅵ. 조총련 동향

1. 개관

- 최근 조총련은 조직 지도부내의 갈등과 북한의 핵문제 및 한국의 대전EXPO 개최에 따른 조총련 사회의 동요 및 조직 이완현상을 각종 정치·문화·체육행사 개최 및 사상교육을 통하여 수습하려 하고 있음.
- 또한 정전협정 40주년 기념일(7.27), 제4차 범민족대회(8.15) 및 정권창건 기념일(9.9)을 계기로 김일성·김정일 부자에 대한 충성심 제고를 위한 김일성 회고록 학습 및 김정일 선전거점 조직을 강화하고 있으며, 조국방문단 사업을 적극 추진하고 있음.
- 한편, 일본정계 재편에 편승하여 일본중의원 선거에 출마할 후보

에 대한 자금지원 등 정계 유력자에 대한 접근을 모색하고 있음.

2. 정치분야

가. 허종만 책임부의장 취임으로 인한 지도부 갈등

- 조총련은 지난 7월초 김정일의 신임을 받고 있는 부의장 허종만을 책임부의장에 임명하였는 바, 이를 둘러싸고 심각한 갈등을 빚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음.
 - 조총련 의장단은 한덕수 의장과 이진규 제1부의장을 비롯한 10명으로 구성되어 있고 조총련 규약상에도 의장 유고시 제1부의장이 의장을 대행하도록 규정(제24조)되어 있음.
 - 그러나 조총련 중앙상임위는 7월초 김정일의 지시를 내세워 책임부의장직을 신설하고 이 자리에 부의장 허종만을 임명한 것으로 전해짐.
 - 조총련 일각에서는 책임부의장직 신설이 중앙위나 확대중앙위 결의후 전체대회에서 승인을 받아야 할 사안임에도 불구하고 중앙상임위 결정만으로 시행되는 것은 ‘비민주적인 편법’이라고 크게 반발하고 있음.
- 허종만 책임부의장은 지난 86년 9월 이후 조총련의 재정, 경제담당 부의장직을 맡아 대북지원 역할을 담당해 김정일의 신임을 얻고 있는 것으로 전해지고 있으며, 한덕수 의장의 병세악화를 계기로(7월 24일 뇌경색으로 졸도) 조직 주도권 장악을 위해 이진

규 제1부의장과 조총련 조직내에서 권력투쟁을 벌일 것으로 보여 주목됨.

— 허종만의 부상에 반대하는 세력들은 허종만이 조총련의 부동산을 부당하게 처분, 북한에 보낼 가능성이 크다는 우려까지 제기하는 등 경계심을 나타내고 있음.

○ 조총련은 이러한 내부반발을 억제하기 위하여 7월 중순이후 국장급 이상 간부들을 대상으로 「지지결의 집회」 및 학습조에 대한 학습회 등을 연이어 개최, 김정일에 대한 절대적 충성과 허종만의 책임부의장직 임명을 문제삼지 못하도록 교육시키고 있음.

나. 미·북회담 성과 선전 및 일본정계·언론계 인사에 대한 접근활동 강화

○ 조총련은 7월 14일 제네바에서 열릴 제2차 美·北 고위급회담을 앞두고 최근 지난 6월에 열렸던 美·北 고위급회담의 성과에 대한 선전활동을 강화하고 있음.

— 이와관련, 조총련은 美·北 공동성명이 발표되던 6월 14일 후 쿠오카현 지부에서 간부회의를 열고 북한의 핵확산금지조약 탈퇴유보가 미국의 압력에 굴하지 않고 정면으로 대응해 얻은 승리라고 강조한 것을 시발로 도쿄본부, 오사카(6.16), 히로시마(6.17), 아이치·치바·가나가와·나카노(6.18), 군마(6.19), 미야기현(6.28) 등에서 잇달아 시국강연회를 열고 미·북회담과 공동성명 발표를 ‘공화국의 자주외교의 승리’로 평

가함.

— 또한 조총련은 각 지방본부별 시국강연회, 학습회 등을 개최, 10대강령 지지서명 운동 및 미·북회담 성과에 대한 선전활동을 대대적으로 전개하고 있음.

○ 또한 조총련은 이들강연회에서 미·북회담이 핵사찰이나 NPT탈퇴문제를 토의하는 데 초점이 모아진 것이 아니라 미국이 북한의 주권과 사회주의 제도를 존중하고 평등한 입장에서 관계를 개선하는 문제를 토의한 정치회담이었다고 왜곡하였음.

○ 조총련이 이처럼 미·북회담 결과를 김정일의 영도력과 자주외교의 승리로 부각시키면서 미국에 대해 대북 적대시정책의 수정을 촉구하고 나선 것은 최근 북한 핵개발 문제로 인한 재일동포 사회의 동요를 막기 위한 것으로 보여짐.

○ 한편, 조총련은 일본정계 재편에 편승하여 일본중의원 선거에 출마할 후보에 대한 지원활동을 강화하고 있음.

— 아이지현 본부의 경우 親北人物인 쿠노 토이찌로와 사회당의 아미오가 유우 후보를 집중 지원하고 있으며, 각 지방 본부별로 협조가능한 후보자를 선별, 선거사무실 및 유세장 방문, 자금지원 등 정계유력자에 대한 접근활동을 강화하고 있음.

다. 정전협정 40주년 기념, 제4차범민족대회 및 정권 창건기념일 축하행사를 통한 조직·사상 강화와 대남 비방활동 강화

○ 조총련은 정전협정 40주년 기념(7.27), 제4차 범민족대회(8.15) 및 정권 창건기념일(9.9)을 맞아 대대적 행사준비의 일환으로 각지 부별 강연회 및 각종 체육·문화행사 개최, 축하방북단 파견 및 축전발송 등을 통해 金日成 父子에 대한 충성심 제고와 조직강화에 박차를 가하는 한편, 남한 현정부의 외교정책을 신랄히 비판하는 선전활동을 강화하고 있음.

— 조총련은 각지부별로 강연회를 열고 金日成 父子에 대한 충성심 제고와 사회주의 조국에 대한 애국심 고양을 독려함과 아울러 중앙본부 이진규 제1부위원장을 단장으로 28명의 축하단이 9억엔의 축하금을 갖고 방북하였음(7.22). 또한 조총련 및 친북단체들은 金父子 앞으로 축전을 발송하였음(7.23 현재 1316건).

— 또한 조총련은 “전민족 대단결 실현, 조국통일을 위한 재일동포 청년·학생들의 대행진 및 축제”(8.4~8.13)를 개최하여 「10대강령」 선전을 통한 연방제통일방안의 대내외 지지여론을 조성함과 아울러 일본 8개도시를 종단하는 대행진 행사를 주최하였으며, 일본에서 개최된 제4차 범민족대회에 적극적인 지원운동을 전개하였음. 또한 정권창건 기념일인 9.9절을 맞이하여 재일조선인 중앙대회 및 각종 체육·문화행사를 개최하였음.

○ 조총련은 최근 이완현상을 보이고 있는 조직사업을 강화하기 위

해 이상과 같은 기념행사를 대대적으로 개최하고 있으며, 각종 학습회 및 조선신보 등을 통한 선전·홍보활동을 강화함과 아울러 단기 조국방문단 사업 등을 적극적으로 전개하고 있음.

- 한편 조총련은 북한의 지시에 따라 한국에 대한 불온우편물 투입에 주력하여 93년 6월 현재 45,677 통을 발송하여 92년 23,135통에 비해 2배에 달하는 불온우편물을 발송하고 있으며, 그 내용은 팀스피리트 비난, 국가보안법 위반자 석방요구, 10대강령 위장평화공세 등을 담고 있음.

— 또한 조총련은 조선신보를 통해 한국정부가 범민족대회의 서울개최를 방해한다고 극렬히 비난하였음.

라. 김부자에 대한 충성심 제고와 10대강령 지지 서명운동

- 조총련은 최근 각지역 조직별로 김일성 회고록 「세기와 더불어」에 대한 토론 및 학습회를 개최하고 조직원 1인당 회고록 1부 보급 및 10대강령 지지서명 20명 이상 확보운동을 전개하고 있음.
- 조총련은 이같은 학습을 통해 계열동포들로 하여금 김일성의 혁명사상과 투쟁경험을 습득하고 김일성에 대한 충성심을 다짐하도록 하는 한편, 김일성이 제시한 「전민족대단결 10대강령」 실현에 앞장 서도록 독려하고 있음.
- 한편, 북한은 최근 해외에서 김정일 선전활동의 일환으로 일본과 일부 親北國家에 「김정일 저작연구소조」, 「김정일 저작연구회」, 「김정일 저작학회」 등을 잇달아 조직하고 있음.

－ 북한은 최근 일본의 도야마(富山), 후쿠시마(福島), 가나가와(神奈川), 사이다마(埼玉) 등 10여개 縣에 「김정일, 저작연구회」를 결성하였음.

- 북한이 일본 각지역에 「김정일 저작연구회」를 대거 조직한 것은 일본내에서 김정일의 이미지를 개선·부각시키며 앞으로 일본의 정계재편 과정에서 일본 신내각하에서 새롭게 전개될 北·日 修交會談에 유리한 여론을 조성하려는 의도로 분석됨.

3. 경제·사회분야

가. 대전EXPO 참가억제 및 조직사업 강화

- 조총련은 교민단체 및 언론매체에 의한 EXPO홍보 및 참관단 모집활동이 강화되고 이에 따라 조총련 조직원들이 심적동요를 보이자 산하조직에 대전EXPO 참가저지 활동지침을 시달하는 등 조직원 단속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음.
 - － 조총련의 모든 산하조직은 7~11월간 월별로 EXPO참가할 가능성이 있는 자의 명단을 특별관리하고 추석고향방문단을 모집하는 민단간부의 접근을 차단하며, 각 지방 본부별로 다양한 대응 행사개최 및 개별 사상교육을 실시하는 등 조직원의 동요·이탈방지를 위한 노력을 경주하고 있음.

나. 북한, 조총련에 1억 4백만엔 송금

- 최근 조총련은 북한으로부터 정권창립 45주(9.9)를 맞아 올들어 두번째로 1억 4백30만엔의 「교육원조비와 장학금」 명목의 조직 운영비를 지원받았음.
- 지난 57년 4월 북한이 조총련에 첫 송금을 시작한 이래 이번 124차 송금으로 북한이 조총련에 보낸 총액은 416억 9004만엔에 달함.
- 북한의 조총련에 대한 송금은 1967년부터 84년까지 매년 약 15억엔 수준을 유지해 오다 85년을 고비로 현저하게 감소하기 시작하였으며, 1991년의 경우 2억 6천만엔, 지난해는 3억 8천만엔에 불과하였음. 이러한 현상은 북한의 외화부족과 경제난이 심화되고 있음을 보여주는 것임.

다. 조총련, 동포생활 상담 강좌

- 최근 조총련은 조직 확대 및 활성화의 방편으로 「동포생활 상담」, 「동포생활 연속강좌」 등을 마련, 계열동포들과의 연대강화를 적극 추진하고 있음.
- 조총련은 이를 위해 도쿄, 오사카, 후쿠오카 등에 상담센터를 개설하고 전체적으로 일정한 날을 지정하여 변호사, 공인회계사, 세무사, 사법·행정서사 등 계열동포들 가운데 유자격자들이 일반 동포들의 결혼, 교육, 취직, 기업경영, 세금, 생활보호 등의 문제점들을 무료로 상담해하고 있음.

- 이와 관련, 조총련은 「동포생활 상담의 날」을 7, 9, 11월중 하루씩 3차례 정하고 재일동포의 혼인, 연금, 상속문제에 관하여 상담할 예정임.

4. 전망

- 향후 조총련은 조총련사회의 동요 및 조직이완 현상을 억제하기 위하여 金父子에 대한 충성심 제고운동 및 사상교육을 대대적으로 전개할 것으로 보이며, 재일조선인들의 일본생활상의 불편을 완화하고 재일조선인사회의 단결을 촉진하기 위하여 세무, 사법, 행정, 사회분야의 다양한 상담서비스를 제공할 것으로 보임.
- 또한 재일조총련은 현재 진행되고 있는 정계재편과정에서 친북한 정치인을 가능한 한 많이 확보하기 위하여 정치자금 및 조직지원 등의 수단을 동원하여 친북한 인사에 대한 접근노력을 강화할 것으로 전망됨.

◎ 發刊資料目錄 案內 ◎

〈세미나시리즈〉

- 91-01 轉換期の 東北亞 秩序와 南北韓 關係
- 91-02 岐路에 선 北韓의 經濟社會: 實相과 展望
- 91-03 北韓體制的 變化: 現況과 展望
- 92-01 南北和解·協力時代, 우리의 座標와 課題
- 92-02 북한의 權力構造와 金日成 이후 政策方向 전망
- 92-03 北韓의 核問題와 南北韓 關係
- 92-04 韓半島 周邊4國의 對北韓政策
- 92-05 轉換期の 南北韓關係: 現況과 展望
- 93-01 統一理念으로서의 民族主義
- 93-02 北韓 核問題: 展望과 課題
- 93-03 中國의 改革·開放

〈研究報告書〉

- 91-01 第2次大戰後 新生國家의 聯邦制度 運營事例
- 91-02 北韓聯邦制案의 分析 및 評價
- 91-03 美國聯邦制 研究: 歷史的 發展過程을 中心으로
- 91-08 韓半島 非核地帶化 主張에 대한 對應方向

- 91-09 東西獨 事例를 통해 본 南北韓關係 改善方案: 정상회담과 기본조약체결 사례 중심
- 91-10 國際的 平和保障 事例研究
- 91-11 在野統一案 研究
- 91-12 蘇聯의 東北亞政策 變化와 東北亞秩序 改編: 1990年代 東北亞秩序 豫測(I)
- 91-13 北韓體制的 實相과 變化展望
- 91-14 「한민족공동체」具體化方案 研究: 社會·文化·經濟 交流·協力 中心
- 92-01 統一獨逸의 分野別 實態 研究
- 92-02 中國의 改革·開放 現況과 展望: 北韓의 中國式 改革·開放모델 受容 可能性과 關聯
- 92-03 美國의 對韓半島政策: 韓國安保와 南北韓 統一問題를 중심으로
- 92-04 日本의 國際的 役割增大와 東北亞秩序: 1990年代 東北亞秩序 豫測(II)
- 92-05 1992年度 統一問題 國民輿論調查 結果
- 92-06 軍備統制 檢證 研究: 理論 및 歷史와 事例를 中心으로
- 92-07 北韓住民의 人性研究
- 92-08 國際社會에서의 南北韓間 協力方案 研究

- 92-09 日本의 對韓半島政策
- 92-10 러시아聯邦의 對韓半島政策
- 92-11 東北亞 經濟協力の 發展方向
- 92-12 統一獨逸의 財政運用 實態研究: 統一關聯 財政政策
中心
- 92-13 南北韓 國力趨勢 比較研究
- 92-14 南北韓 社會·文化共同體 形成方案: 社會·文化的 同
質性 增大方案 中心
- 92-15 北韓의 權力엘리트 研究
- 92-16 東北亞 新國際秩序에서의 韓半島 統一基盤 造成方案
- 92-17 南北韓 經濟共同體 形成方案
- 93-01 1993年度 統一問題 國民輿論調查 結果
- 93-02 金日成著作 解題
- 93-03 日本의 對北韓政策
- 93-04 中國의 改革·開放 加速化와 東北亞秩序: 1990年代
東北亞秩序 豫測(Ⅳ)
- 93-05 中·臺灣關係의 現況과 發展方向
- 93-06 美國 클린턴 行政府의 東北亞政策과 東北亞秩序 變
化: 1990年代 東北亞秩序 豫測(Ⅲ)
- 93-07 東北亞 地域에서의 多者間 安保協力體 形成展望과 對
應策

93-08 獨逸統一後 東獨地域에서의 私有化政策 研究

93-09 對北 投資保護 및 紛爭解決方案 研究

〈統一情勢分析〉

91-01 韓·蘇, 日·蘇 頂上會談 結果 分析: 韓半島 周邊情勢 및 南北韓關係에 미칠 영향을 중심으로

91-02 고르바초프 權力的 現況과 展望

91-03 李鵬 中國總理의 訪北 結果 分析: 韓半島 周邊情勢 및 南北韓關係에 미칠 영향을 중심으로

91-04 第85次 國際議會聯盟(IPU) 平壤總會 綜合分析

91-05 中·蘇 頂上會談 結果 分析

91-06 北·日, 北·美關係 變化展望과 對策

91-07 北韓의 유엔加入宣言의 影響과 政策變化展望

91-08 美國의 東北亞 安保政策 基調와 最近動向

91-09 유고슬라비아의 民族葛藤과 聯邦解體 危機

91-10 中國의 對韓政策 展望

91-11 엘친의 러시아大統領 當選이 蘇聯國內情勢에 미칠 影響 分析

91-12 美·蘇의 對 東北亞政策과 東北亞 軍事秩序 再編 可能性

- 91-13 美·蘇 頂上會談의 結果 分析
- 91-14 戰術核 관련 부시 美大統領 宣言이 東北亞 및 韓半島
안보에 미치는 影響
- 92-01 부시 美國大統領의 아시아4個國 巡訪結果 分析: 南·
北韓關係와 관련하여
- 92-02 豆滿江地域開發計劃 發展方向
- 92-03 中國의 改革·開放 深化가 北韓에 미치는 影響
- 92-04 러시아聯邦의 改革과 韓·러關係 展望
- 92-05 東北亞情勢와 統一環境: 1992年 上半期
- 92-06 북방정책 이후 동북아정세와 한반도 통일환경
- 92-07 豆滿江地域開發計劃의 現況과 展望: 開發代案 및 法
制度 中心
- 93-01 最近 러시아聯邦의 政局推移: 國民投票 結果를 中心
으로
- 93-02 北韓 核問題의 展開過程 分析 및 展望
- 93-03 北韓의 對南動向 分析(1993. 1~6)
- 93-04 「조국통일을 위한 전민족대단결 10대강령」과 北韓의
對南政策
- 93-05 東北亞 多者間 安保協力體 構成展望과 南北韓關係
- 93-06 北韓의 對南動向 分析(1993. 7~9)

〈世界主要事件日誌〉

- 91-01 世界主要事件日誌(1991. 4. 1 ~ 1991. 6. 30)
- 91-02 世界主要事件日誌(1991. 7. 1 ~ 1991. 9. 30)
- 91-03 世界主要事件日誌(1991. 10. 1 ~ 1991. 12. 31)
- 92-01 世界主要事件日誌(1992. 1. 1 ~ 1992. 3. 31)
- 92-02 世界主要事件日誌(1992. 4. 1 ~ 1992. 6. 30)
- 92-03 世界主要事件日誌(1992. 7. 1 ~ 1992. 9. 30)
- 92-04 世界主要事件日誌(1992. 10. 1 ~ 1992. 12. 31)
- 93-01 世界主要事件日誌(1993. 1. 1 ~ 1993. 3. 31)
- 93-02 世界主要事件日誌(1993. 4. 1 ~ 1993. 6. 30)

〈年例情勢報告書〉

- 91 統一環境斗 南北韓 關係: 1991~1992
- 92 統一環境斗 南北韓 關係: 1992~1993

〈論 叢〉

統一研究論叢 創刊號(1992. 6)

統一研究論叢 第1卷 2號(1992. 12)

統一研究論叢 第2卷 1號(1993. 7)

THE KOREAN JOURNAL OF NATIONAL UNIFICATION vol.
1(1992)

THE KOREAN JOURNAL OF NATIONAL UNIFICATION vol.
2(1993)

〈資 料〉

92-01 統一 吳 北韓關聯 研究文獻目錄(國文篇)

92-02 統一 吳 北韓關聯 研究文獻目錄(外國語篇)

93-01 藏書目錄：單行本・研究報告書

93-02 藏書目錄：特殊資料

北韓의 對南動向 分析 (1993. 7~9)

統一情勢分析 93-06

發行處 民族統一研究院

編輯人 民族統一研究院 北韓研究室

서울 중구 장충동 2가 산 5-19

전화 : 237-9288, FAX : 232-5341

印刷處 오름시스템(주) 전화 : 273-7011

印刷日 1993년 10월 일

發行日 1993년 10월 일
